세계일보

2005년 10월 20일 010면

환경부 "상수도 관리권 못내놔" 건교부

일원화 싸고 신경전 치열

환경부 "광역·지방 체계 통합 우리가 맡아야"

건교부 "국토개발과 밀접… 현체계 유지해야"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를 둘러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간 신경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물관리정책'이란 주제 국정과제회의에서 댐 등 물관리 국가계획을 수립·조정할 '물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현재 조정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에 최종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리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건교부 간 해묵은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 관리권 중에서 광역상수도 계획과 인가권은 건교부, 지방상수도 계획과 인가권은 환경부가 갖고 있어 그동안 상수도설비 과잉중복투자, 도·농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광역·지방 상수도로 분리된 상수도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상수도 정책은 국토개발과 연계가 불가피해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최근 환경부가 상수도 총괄계획권을 갖는 대신 건교부가 현행 대로 광역상수도 인가권과 세부계획권을 유지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환경부는 "인가권 없는 계획권은 현행 상수도 관리권 이원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수도 문제는 이원화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인가권과 세부계획권을 포함해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중재안에 찬성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생활용수 외에 공업·농업용수 등과 연계해 홍수를 예방하고 신도시 등 개발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세부계획과 인가권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朝鮮日報 2005년 10월 20일 a06면

누가 뭐래도 위원회는 늘어난다

盧대통령 '물관리위원회' 신설 지시
식품안전委도 준비… 연말엔 74개될듯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위원회가 19일 또 하나 늘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물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광역 상수도 관리는 건설교통부, 지방 상수도 관리는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총괄할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물관리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위원회는 불과 5개월 전까지 총리실에 있었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97년 설치돼 새만금사업 등 물 관리정책의 부처 간 조정 업무를 해왔다. 이 위원회는 이해찬 총리의 지시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설치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폐지됐다. 5개월 뒤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다시 생기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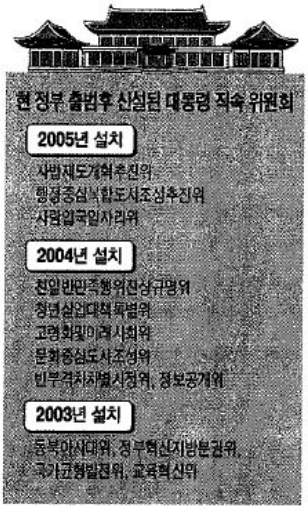
현 정부 들어 위원회는 현안만 생기면 하나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정부 들어 13개가 신설돼, 올 8월 말 현재 24개가 됐다. 물관리위원회에다 출범을 준비 중인 식품안전위원회까지 합치면 연말까지 26~27개가 될 전망이다.

총리 산하 위원회도 2년 동안 15개가 늘었다. 2003년 33개였던 위원회가 지난해 43개로 10개 증가했고 올해는 5개가 더 늘어 48개가 됐다.

올해 물관리조정위 등 4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 등 올 들어서만 9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각 부처 산하 위원회까지 합하면 각종 위원회는 381개나 된다. 현 정부에서 23개가 늘었다. 381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743억5600만원이고 위원회 운영 인력도 3118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작업을 통해 폐지나 조정을 추진 중인 위원회가 6개 정도이며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처럼 신설된 위원회 중에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많다"고 말했다.



김홍진기자 (홍로그mailer.chosun.com

한겨레

2005년 10월 20일 006면

국가계획 수립·조정 '물관리 위원회' 신설

정책집행 일원화 안돼 혼선 여전할듯

물관리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행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물관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집행, 관련 인가권은 여전히 여러 부처가 나눠 말을 것으로 보여 부처간 마찰과 혼선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나뉘어 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돼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 중인 개선방안이 나온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물관리권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권 강화 △특정 부처로의 업무 일원화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의 조정권 강화 방안은 앞서 물관리기획단이 실패한데다, 업무 일원화는 부처 통합까지 논의될 때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나 빠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1인당 급수량 10% 절감 등 물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댐간 연계운영 강화 등으로 신규 댐 건설 수요를 흡수해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정책전환 △지하수 공개념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 등 6개 분야의 핵심정책과제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도 확정됐다.

지속위 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 신설 결정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이 돼 온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어, 관련 부처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최근 수질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간이 상수도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는 수질과 시설이 매우 미흡한 점을 고려하되, 지자체의 자체 노력 등도 평가하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머니투데이 2005년 10월 20일 004면

10년논쟁 '물 관리권 일원화' 불발

물관리위원회 신설, 추가논의… 해결없이 '옥상옥 논란' 우려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권'에 대한 결론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대신 가칭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추가 논의키로 해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물관리권'을 비롯한 물관리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물관리 국가계획을 수립·조정할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칭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지,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 둘지와 상설기구화 여부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물관리권'과 관련해 △관리부처 일원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위원회 설치 3가지 방안이 건의된 가운데 위원회 신설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1994년 건교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된 뒤 상수도 수량(건교부)과 수질(환경부) 관리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나타난 '비효율' 조정에 관한 '공'을 신설될 물관리위원회에 떠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 협세가 투입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국가조직의 덩치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신설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권 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10년이 넘게 부처간 '줄다리기'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물관리위원회는 각종 물 관련 계획을 수립, 조정, 점검하는 기능까지만 갖고 집행기능은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그대로 갖는 방안이 유력시돼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발전위는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발표했으나 환경부 안팎에서는 "논란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논란의 시작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기자 han1900

매일경제 2005년 10월 20일 a39면

물관리 전담 위원회 생긴다

盧대통령, 신설 지시…상수도 관리 조정은 불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520만명의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과 시설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승준 국정과제국장은 "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련 계획 수립·조정·점검을 맡되 집행은 각 부처가 그대로 맡는다"며 "물관리위의 소속 등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지속가능발전위는 물관리 개선방안으로 물관리위 신설 외에 물관리권 일원화, 협의조정 기능 신설을 함께 제시했으나 물관리위 신설이 채택됐다"며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특히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 통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류됐다. 대신 국무조정실이 마련중인 개선안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상수도 관리권을 놓고 환경부와 건교부의 '물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중심의 수자원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물 부족을 해소하기로 하고 물수요관리 10개년(2007~2016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 6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별로는 대규모 댐 건설 지양, 기존 댐 재평가 등을 통해 기존의 댐 건설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지하수 공개념' 을 도입하기로 했다.

윤경호·김기철기자

'서울신문 2005년 10월 20일 006면

'물관리위원회' 신설

광역상수도 인가권 총리주재회의서 결정

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 기능은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수도 관리의 통합 여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일 이해찬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연 뒤 현재 건교부가 갖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리기능 가운데 '계획수립은 환경부로 이관, 인가권은 건교부 유지'란 조정안을 마련했는데, 향후 회의에선 인가권의 환경부 이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서울신문 10월19일자 1면 참조). 정부 관계자는 "총리 주재로 한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중복투자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선 광역상수도 인가권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관리 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 부처별 물관리 계획의 통합·조정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점검기능을 수행케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서울신문 2005년 10월 20일 027면

물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높여야

물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놓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장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수도와 공업·농업용수 등 물의 용도가 워낙 다양하고, 부처 간 미묘한 주도권 다툼 때문에 교통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부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간 토론을 수십차례 거쳤음에도 큰 방향조차 잡지 못한 것은 물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중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낭비를 줄이려면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이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돼 6~7년 뒤에는 연간 40억t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 총량(2001년 기준)이 연간 1276억t이지만 댐과 하천, 지하수를 통해 얻는 총이용량은 26%인 133억t에 불과하다. 엄청난 수자원이 시설부족과 관리부실로 유실되는 실정이다. 질적인 면도 문제다. 특히 상수원 오염과 정수시설 부실로 수돗물은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이다. 공업·농업용수는 제외하더라도 상수도조차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가 나눠 맡아 수질, 요금, 상수원 개발 등이 제각각이다.

이래서야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광역·지방 상수도 관리분담에 따른 중복투자로 재정손실만도 4조원에 이른다. 물 관리 일원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는 부처 이기주의나 각종 인·허가권에 얽힌 담당 공무원의 이권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자원 정책이 댐 신규건설 등 공급보다 품질 중심의 수요관리로 방향을 잡았다면 댐 건설은 건교부가 그대로 맡되 상수도관리권은 환경부로 모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일보 2005년 10월 20일 a02면

물관리위원회 신설키로

관련정책 수립… 집행은 건교·환경부가 계속 담당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승준 국정과제국장은 "물관리위는 물관련 계획수립과 조정, 점검을 맡되 집행은 각 부처가 지금 그대로 담당한다"며 "물관리위의 소속 등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 "관리권이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해 있는 상수도 관리권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마련 중인 개선안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중심의 수자원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수요관리 10개년(2007~2016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 6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을 자양하고 기존 댐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제일경제

10월 20일 004면

노 대통령 '물 관리 위원회' 신설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물관리 개선을 위해 가칭 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 있는 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520만명의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과 시설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물관리위원회는 부처별 물 관련 계획의 통합·조정·점검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물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승준 국정과제국장은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계획수립, 조정, 점검을 맡되 집행은 각 부처가 그대로 맡는다"며 "물관리위의 소속 등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10월 20일 019면

물 관리,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

국정과제회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의 주관으로 우원식 · 노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농림 · 환경 · 건교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기획예산처차관, 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논란이 되어 온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공급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댐을 재평가, 댐 사이의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댐 전용 등 댐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분산되어 있고 상수도의 경우는 광역상수도(건교부 ·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환경부 ·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물수요 과다예측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 조정 · 점검하기 위해 "(가칭)물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약 52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가 부족하고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헤럴드경제 2005년 10월 20일 008면

또 위원회인가

이문환 〈정치사회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정과제회의는 여당 의원과 국무조정실장, 농림 · 환경 ·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물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의 면면은 화려했지만 결론은 퍽 싱거웠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의 결론은 국가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 조정 · 점검하는 역할의 가칭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0여년간 부처 간, 전문가 간 논란이 돼온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미 국무조정실이 부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회의 설립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뿐이다. 실제 이 위원회의 인력 구성 방안 등 밑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어 물 수요의 과다 예측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늘 제기돼 왔다. 1인당 물 사용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상수도의 시설용량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 광역상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48.4%, 지방상수도는 54.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과연 물관리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만 조직을 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과연 위원회의 결정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지, 기존 부처들이 맡아왔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이관될는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이미 일일이 열거키 어려울 만큼 숱한 위원회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속 시원한 해결점을 도출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물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lazyfair@heraldm.com

문화일보

2005년 10월 20일 002면

취재수첩

위원회 신설이 '만능키'인가

정희정
사회부기자

'위원회'는 만능 키인가.

19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해묵은 물 관리권 관할 조정에 실패하고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총리실과 청와대가 온갖 '조정'과 '압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10년 묵은 쟁점을 또하나의 위원회 신설로 해소해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봉합했음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위원회의 비효율성을 들어 관리권 조정 무망론이 제기되고, 또하나의 '혈세낭비' 위원회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온다.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그동안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합리적인 정책조정과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상수도를 규모별로 건설교통부(광역)와 환경부(지방)가 10여년간 나눠 관리해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상수도 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로 4조원에 달하는 중복·과잉투자가 이뤄졌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평균가동률은 각각 48.4%, 5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국민들은 수질에 심각한 불신감을 갖고 수돗물은 마시려 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신설하는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지 국무총리 산하에 둘지, 상설기구로 만들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혈세, 국력이 소모돼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신설하겠다는 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즉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1997년 설치)가 불과 5개월 전까지 총리실 산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답답하다. 위원회를 만들고 없애고 또 만들고 하는 게 과연 능사일까.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히 차단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미봉책만 거듭할 것인지.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뿐이다.

nivose@

제일경제 10월 21일 004면

盧 '건교·환경부 통합' 언급

청와대에서 19일 오전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환경부 통합론'을 잠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발언배경 등에 관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일부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반 물관리체계 외에도 개발과 보전 간 조정이 잘 안되고 마찰이 잦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건교부와 환경부가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두 부처의 통합론을 제기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어 통합론에 대한 추병직 건교장관과 이재용 환경장관의 입장까지 물었으며 두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부처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부처통합은 이해당사자와 논쟁거리가 많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다들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취지로 통합론 발언 수위를 낮춘 뒤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통합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건교-환경부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고 가볍게 언급한 사안"이라며 "결코 무게가 실린 발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통합론에 대해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분석하느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장관들 "반대 안해"… 발언배경 촉각

靑 "입장차 커 가볍게 언급했을 뿐"

건교부 한 관계자는 "양 부처 통합론은 건교부 수송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오래전부터 일각에서 거론되온 사안"이라며 "통합이 이뤄지면 물관리권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일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환경단체 일각에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접목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두 부처가 통합될 경우 부처 규모가 비대해지고 개발논리에 보전논리가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양규현기자 khyang@ jed.co.kr

朝鮮日報 2005년 10월 21일 a09면

환경장관만 '깔따구 답신'… 대책위 "원론적인 얘기"

색연필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신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준설토투기장에서 날아든 깔따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남 진해시 웅천동과 웅동 1·2동 일대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 "원인조사 및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사업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주)부산신항만과 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이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에 19일 보낸 서신에서 "해충피해 발생 이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 마을방향 호안 방충펜스를 설치하고 해충의 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선충 이용 등 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죽은 깔따구 떼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4당 대표와 법무·환경부 등 3개부처 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서신을 보냈고, 법무부는 깔따구 떼를 대책위에 되돌려 보냈으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4당과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 김종민(47)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의 서신은 원론적인 얘기"라며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생계대책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인범기자 (블로그)ibkang.chosun.com

한국일보

2005년 10월 21일 a02면

기자의 눈

'물관리' 또 위원회 신설

송용창
정치부 기자

19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선 10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인 상수도 관리권 관할조정 문제가 다뤄졌다.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교부(광역 상수도)와 환경부(지방 상수도)로 나눠져 과잉투자와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무성하던 터였다. 상수도 평균가동률이 광역은 48.4%, 지방은 54.8%에 불과해 4조원이 과잉 투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조정은 실패했다. 국무조정실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양 부처 모두가 퇴짜를 놓을 만큼 신경전은 대단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0년을 끌어온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엉뚱하게도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핵심 쟁점인 상수도 관리권 문제는 일단 유보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물관리 정책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와 유사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었다. 이번과 똑같은 목적으로 1997년 설치됐다가 부처 간 힘겨루기 속에 유명무실해져 폐지됐던 위원회였다. 결국 꿇은 상처는 남겨둔 채 과거의 위원회를 부활시켜 일단 봉합한 셈이다.

공은 다시 국무조정실로 돌아왔지만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만 나온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다. 비정상적인 관리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처 밥그릇 싸움 하나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로 시간벌기나 궁리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hermeet@hk.co.kr